순천시 국제안전도시 재인증…'3기 국제안전도시' 탄력

심사단장 "손상 감시·교통 안전 등 정책 국제적으로 권장할 만"

순천시, 안전 증진사업 발굴·안전 협력 교류망 활성화 등 추진

순천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또다시 받으며 '3기 국제안전도시' 구축에 탄력을 받았다.

순천시는 지난 22~23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이하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최종 심사를 받은 결과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처음 공인을 받고 5년 뒤 재인증을 이뤘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가 5년간 인증하는 '국제안전 도시'는 모든 자연·사회 재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순천시가 지난 22~23일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최종 심사 결과 재공인이 확정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지난 4월에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1차 국내 심사를 통과하고, 이달 22~23일 ISCCC 심사위원인 쿠스부프 달랄(스웨덴) 심사단장 등 국외 심사위원단 3명이 영상회의 방식을 빌어 심사를 벌였다. 2차 최종 심사에서는 조준필 국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센터장이 순천을 찾아 심사를 주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7개 분야에 대해 순천시가 지난 5년간 들인 안전 증진 노력을 평가했다.

순천시는 총괄 보고를 하고 손상 감시 체계, 교통안전, 낙상 예방, 자살 예방, 폭력·범죄 예방, 우수사례 등 7개 분야에 대해 발표를 했다. 심사위원들은 영상회의로 질의·응답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민·관 협력(거버넌스), 손상 감시, 포괄적 손상 예방, 취약계층·취약 환경, 평가, 교류 추진사항 등 6가지 공인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순천시는 맞춤형 안전 교육인 '시민 안전 리더 프로그램'을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시는 자격 심사와 전문 교육을 통해 '시민 안전 리더'를 선정하고 안전 취약계층인 유아,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쿠스부프 달랄 심사단장은 순천시 시민 안전 리더에 대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전파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좋은 시책"이라 평했다.

순천시는 ISCCC에 인증등록 절차를 거친 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공인 이후에는 안전 증진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안전협력 교류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심사단장은 총평에서 "순천시는 지난 2018년 공인 이후 시민이 참여 주도하는 교통안전 사업, 찾아가는 노인 낙상 예방프로그램, 사전예방중심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업을 통한 폭력 예방 추진사업 등을 벌여왔다"며 "분야별 안전취약 부분의 통계 비교분석 자료에 근거해 우수하고 과학적인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취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그동안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안정증진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지원

내달 1일부터 첫째아 80만원·둘째아 100만원

순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 및 산후조리시설 이용 여부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출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기준은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이상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를 지급한다.

이는 현금성 지원으로 산후조리시설 미이용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각자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후 회복이 가능하다.

출산 시 1회 지원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산모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이다.

이 외에도 순천시는 올해 저2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추진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국동항 장기 방치 선박 단속 나서

514척·불법 적치물 100t 적발

제거 공고 등 거친 뒤 고발키로

여수시가 국동항에 오랫동안 방치된 선박에 대한 파악을 마치고 단속에 나선다.

국동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이다. 장기 방치된 선박은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한다.

250m 파제제(소규모 방파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쌓여 미관을 해치고 있다.

여수시는 이달 초에 장기 방치 선박과 파제제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장기 접안 추정 선박은 97척,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이 적발됐다.

조사된 불법 적치물은 60여 점, 약 100t에 달한다.

여수시는 해당 선박이 어업허가 취소나 어선등록 말소 대상이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어선등록증이 붙여지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선박은 제거 공고를 한 뒤 처리하거나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폐기 처리 선박이 50척이 넘어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침몰 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를 한 뒤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하고, 처리되지 않은 선박은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수시가 국동항에 오랫동안 방치된 선박과 불법 방파제 적치물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여수 국동항 전경. 〈여수시 제공〉

또 항내 파제제 위 그물·냉장고·통발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제거 공고를 하고, 처리 업체를 선정해 9월 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단순 장기 방치 어선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법에 따라 처리가 어렵다. 여수시는 장기 계류하거나 입·출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국동항이 어항으로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라며 "선박 등 처리 때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 흑돼지·멜론·토란으로 만든

어린이 먹거리 기대하세요

강레오 셰프 참여 제품 개발 중…10월 심청어린이대축제때 판매

곡성군이 흑돼지, 멜론, 토란 등 곡성의 특산품을 활용한 '어린이 먹거리 개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지역 내 업체들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는 강레오 셰프가 컨설턴트로 참여해 곡성군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강레오 셰프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곡성 깨비정식' 개발에도 참여한 바 있다.

어린이 먹거리 컨설팅이 완료되면 10월6일부터 9일간 열리는 곡성 심청어린이대축제 기간에 시범 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어린이 먹거리는 10월쯤 곡성문화관광 홈페이지, 곡성군 공식 블로그를 통해 관련 이벤트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만의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 먹거리를 개발해 곡성군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곡성만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광양시의회,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 공모

7월 10~14일 온라인 접수

광양시의회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전문 업체에 위탁해 공개 모집한다.

응시원서는 7월 10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 하면 된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으로 4명을 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근무 실적평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분석 지원하고 시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및 참석 등 지원, 자료 수집과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광양시의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실기 및 면접시험으로 나눈 단계별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유능한 정책지원관의 임용으로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귀농 농업 창업 3억 주택 구입 7500만원

보성군, 30일까지 지원 사업

보성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사회 정착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의 경우 최대 4회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2회 75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율은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비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사업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지참 후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성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귀농·귀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귀촌 지원 센터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대대적 가로수 정비·방제 작업

옛 국도 플라타너스 제거 등 안전 가로경관 조성

고흥군이 안전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가로수 정비에 나서고 있다. 〈사진〉

가로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이 크지만 도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대형버스 차량 운행 시 부딪히거나 교통표지판을 가려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

고흥군은 도로변 위험 가로수를 일제 정비해 군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로수 가지 밀생으로 인한 병해충을 예방하고 도로변 시야를 가려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위험이 큰 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안전한 가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농경지 일조권 피해 및 강풍으로 인한 전도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구국도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를 순차적으로 제거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 외에도 대형버스의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고흥만 벚나무길 등 주요 관광지로 연결되는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여름철 벚나무에 많이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미국흰불나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 작업도 병행해 병해충을 예방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군은 이번 작업을 통한 수목의 생육환경과 가로경관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수목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4필지 상향 조정 공시

광양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7일자로 공시했다.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지난 4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향요구 12필지, 하향요구 80필지 등 92필지 신청을 받았다.

전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9만5467필지 가운데 0.002% 비중인 4필지가 조정됐다.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를 벌여 조정 대상 4필지를 선정했다. 이들 필지는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조정 내역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kras.go.kr)나 광양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종태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